
교육부 업무보고

2025. 12. 12.

I.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 국가책임형 유아 교육·보육 실현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특별회계 신설('25.12.)하고,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지원* 확대
 - * '25년 7월부터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실시, '26년 지원 대상을 만 4~5세로 확대 예정
-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연장('25.8.)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기반 마련

- 거점국립대를 5극3특 전략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혁신하고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의제 설정 및 재정 확보*
- * 거점국립대 교육혁신 지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을 위한 '26년 예산 총 3조 1,448억 원 편성
-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30)

□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생애주기 맞춤형 AI교육과 혁신·융합·실무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 수립('25.11.~)

□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

- 초·중학교에 헌법교육 전문강사 토론식 특강을 실시('25.4분기, 914학급)하고, 학교 안팎의 정치적 편향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방과후학교에도 교육의 중립성 의무 부여, 부적절한 교육 운영한 대안교육기관 패널티 강화

개선 필요사항

- ☞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개인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 ☞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2 향후 업무추진방향

1.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교육분야 대응 전략 총괄

- AI 기술·산업의 혁신·도약을 주도할 인재의 육성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보편적 AI 활용과 AI 기본소양 교육 전략 수립
- 교육목표와 방법, 교육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 함양 방안 수립
 - * 창의성, 질문능력, 자기주도성, 사회-정서 역량, 협력·소통, 비판적 사고 등
- 학생·학부모·교원이 AI 대전환기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업무상 혜택을 누릴 기본권* 보장 전략 마련
 - * (예시) 학생의 학업성취도 분석, 학교 행정업무 자동화·효율화, 진로·진학 상담

□ 지역·산업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소멸에 선제 대응

- 정부 주도, 교육청·학교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지역사회의 주도성을 존중하고 강점을 살리는 교육정책 계획·실행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권역별 거점국립대·특성화 대학을 지역혁신 동력으로 육성
- 학교를 교육·돌봄·문화·예술 기능이 결합된 지역의 생활 거점으로 재구조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방형 학교 모델 확산

□ 기후위기 시대 생태전환교육 및 친환경 교육 인프라 확충

- 기후·생태전환 교육을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하고, 프로젝트·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 추진
- 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 학교를 탄소중립 실천·교육 모델로 전환

2.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 교육·보육 국가책임 강화 및 온동네 초등돌봄

- 영유아기부터 지역·이용기관 간 격차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재정 지원 강화를 통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실현
- 학교·지자체·지역기관이 연계된 온동네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바우처 지원으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완화

□ 모든 학생의 학습권,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보장

- 기초학력의 체계적 진단과 맞춤형 보정이 연계된 국가책임 기초학력 체계를 고도화하고, 특수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보호
- 상담부터 치료까지 지원체계 정비와 위기학생 지원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학내외 안전망 강화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엄정 대응과 분쟁 예방·조정 시스템 정비, 교육활동 보호센터·법률·심리 지원 확대

3.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 국민주권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

- 학생들이 헌법 가치, 올바른 역사 인식 등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강화

□ 회복된 대한민국의 국격에 부합하는 교육분야 역할 확대

- 전세계의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의 교육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 확대

비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목표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 실현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①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 ① 학생, 교원이 AI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실현 ②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	▶ 지역 소멸 위기의 극복 ③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④ 소멸위기지역의 교육력 제고
②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 기후·환경 위기의 극복 ⑤ 기후·생태전환교육의 강화 ⑥ 교육시설의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①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습 안전망 구축 ③ 학생 마음건강 지원 ④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 국민이 원하는 변화 ①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②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개방·활용 ③ AI 대학 상담 시스템 구축	▶ 세계가 기대하는 변화 ④ 국내외 한국어교육 고도화 ⑤ 교육 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주요 쟁점이슈

- ① 영유아 사교육 대책
- ②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 ③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II. 중점 추진과제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① 학생, 교원이 AI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실현 (국정과제 99)

□ AI를 친숙하게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학교 생태계 구축

- 학교가 AI 교육자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26. 선도학교 1,900교 운영), 안전성·효과성 담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26년~)
※ AI 교육자료 : 수업용 다양한 AI 도구(舊AI디지털교과서, 코스웨어, 에듀테크 등) 총칭
- 학생 맞춤형 학습 등을 위해 AI 기반 학습데이터 수집·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수업·행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가능한 'K교육 AI' 개발('26년~)
- 최대 10G급 초고속 무선망 확충, 1인 1디바이스 보급·최적화, 인프라 전담인력(디지털튜터) 배치 등 학교현장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고도화

□ 모든 학생이 AI를 주도적, 비판적으로 활용하도록 교육

- AI 시대에 필요한 질문하는 힘, 비판적 사고력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질문중심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

※ (선도교원 양성) '26년 3천명 → '27~'29년 7천명, (질문하는 학교) '26년~ 200교 이상, (서·논술형 평가 AI 학습데이터 구축) '26년 착수 → '29년 완료

- AI 교육 필수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26년 하. 국교위에 요청)하고, 양적·질적으로 AI 교육을 강화한 AI 중점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

* AI 관련 교과 시수를 일반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2배(34시간→68시간), 중학교 1.5배(68시간→102시간) 등 확대 ('26년 1,000개교 → '28년 2,000개교)

- AI를 활용한 교육 사각지대(기초학력, 특수교육, 이주배경, 농어촌 등) 학습권 보장 및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콘텐츠 개발·제공

- AI 올바른 활용을 위해 교과연계형 AI 윤리콘텐츠 개발·제공('26년~) 및 교수·학습·평가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②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 [국정과제 99]

□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다층적(혁신·융합·실무) AI 인재 양성·확보

- 혁신 혁신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학·석·박 패스트트랙 신설*, 우수 학부생 발굴·지원(400명, 연 2천만 원), 박사후단계 제도화 및 지원 강화**
 - * 통상 최소 8년 → 5.5년, AI 영재 진학 시스템과 연계 시 고등학교부터 7.5년 만에 박사 배출
 - **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 박사후연구원 등 지원 규모 : ('25)1,352명 → ('26)2,000명 이상
- 융합 학부 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대학원 융합연구 지원* 확대, AX 부트캠프** 운영을 통해 첨단지식과 AI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
 - * '두뇌한국 21' 사업 내 AX 3개 연구단을 선정·지원('26년 42억 원)
 - **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미래차, 반도체 등 6개 분야 44개교 운영
→ 우수 과정 운영 10개교 선정 후 AX 융합과정 운영 지원(교당 5억 원 추가 지원)
- 실무 AI·SW 분야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직업계고 AI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AID(AI+Digital) 중심 전문대학** 운영
 - * ('26) 마이스터고 7교 특성화고 100교 AI 역량 강화 지원 및 AI 중심 학과 재구조화 추진
 - ** ('26) 24개교内外 운영, AI 인프라 조성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혁신 지원
- 확보 GKS 이공계 석박사 확대*, 27개 BK21 우수대학에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 적용, 외국대학교원의 국내대학겸직 특례 마련 등 해외우수인재 확보
 - * GKS(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석박사생 중 이공계 비율 45%까지 확대(~'27)
 - ** 통상 6년 소요되는 유학생의 영주 비자(F-5) 획득기간을 최소 3년으로 단축

□ AI시대에 필요한 인간다움을 위한 독서·인문교육 강화

- 학생 흥미·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책 읽는 학교 문화('26년 신규 1,000교) 조성 및 교원 독서교육 실천활동 지원**
 - * EBS 진로 연계 독서 튜터링(멘토 교사 150명, 멘티 고1 1,000명), 독서 흥미도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 ** 선도교원 양성(약 270명), 교과 수업 독서 실천활동 지원(1,000명), 교원학습공동체(300개)
- 인문사회 분야 대학생 융합 및 AI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26년 HUSS 11개 사업단) 및 교양교육 혁신모델 확산('26년 신규 2개교, 150백만 원 지원)
- 인문사회 학술지원 확대('25년 3,590억 → '26년 3,884억), 박사급 연구자 국외연수(신규 20명, 50백만원), 거점국립대 연구소 지원(신규 3개교 교당 40억 원)

③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국정과제 55-1~4]

-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
 - 거점국립대 집중 지원(5년간 4조원 이상), 대학 자체수익 확충 등을 통해 서울대 70% 수준까지 단계적 교육비 투자 확대('26.~)
 - '26년부터 3개 거점국립대에 전략적·집중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 5극3특 성장엔진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육성('25.12.~)
 - 기업·과기원·출연연 등과 공동연구장비시설 구축 및 공동 R&D 추진
 - 석박사급 신진연구자 양성을 위해 학석박 통합·연계과정 확대, 학부생 연구참여 및 인턴십 등 추진
 -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연구비·장비·정주 등 패키지 지원, 기업·출연연 겸직 활성화 등 제도개선
-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국립대 재학생 학비 지원 강화('26.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 활용)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 교육·연구 여건 개선
- 지역-대학-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동반성장 추진
 - 5극3특 권역별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과제 지원 확대, 초광역권 대학 간 첨단 분야 인재양성·창업·기술사업화 협력 촉진을 통해 기술주도 성장 뒷받침('26.상~)
 - 계약학과(정원) 설치 확대, 기업 부담금 완화, 산학겸임교수 확충 등 기업-대학 간 인재양성 협력 강화 지원('26.상~)
 - 지역 맞춤 및 재직자 등 성인 친화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을 개방형 지역 평생·직업교육 허브로 육성('26.상~)
-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립대학 혁신·구조개선 지원
 - 산업수요와 연계된 학과구조 개편 등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특성화지방대학 규제특례 확대('26.상~)

-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

* 법정 인상 상한(고등교육법 제11조) :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

- '40년 대입자원 약 17만명 감소 전망을 고려한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26.상)→사학구조개선 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조개선 본격 추진*

* '25.8.1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0년 한시, '26.8.15. 시행 예정)

④ 소멸위기지역의 교육력 제고 (국정과제 55-5)

□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특화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집중 재정지원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상향식 지역교육 혁신* 추진

* 가칭 지역교육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25.12~), 교육특구 지정·운영계획 마련('26.상)

- 학교가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의 정주기반, 공공서비스, 생활SOC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모델을 확산하여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견인

* 「접경지역법」, 「인구감소지역법」 등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등

< 지역교육 혁신모델(예시) >

- (소규모학교형) 생태·환경교육, 농어촌유학 등 교류, 초등 저학년(1~4) 중심 운영
- (거점학교형) 학교통폐합,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본교-분교 캠퍼스, 통합 학구
- (돌봄복지형) 야간·주말·방학돌봄, 방과후심화 프로그램, 통학버스, 지자체 장학금
- (복합시설형) 체육관·도서관·수영장 등 공유·개방, 지역시설·인력을 교육에 활용

□ 중앙 단위의 체계적 지원 및 관리

- 관계기관(행안부, 지방시대위)과 협력을 통한 시설 투자, 재정 인센티브, 교원 배치 확대 등 획기적 행·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로 성과 창출

< 행재정 지원(예시) >

- (재정·인력 확보) 교부금 특례, 통폐합 인센티브(40~90억), 교원정원 배치기준 개선
- (학교시설 투자) 학교 신설(300억), 복합시설(50억), 기숙사(40억)
- (프로그램 지원) 기초학력, 문예체, 과학교육, 원어민영어 지원금 등 총액(Block) 교부
- (규제 특례) 통학구역 조정,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교육과정 자율화, 지역교원제

5 기후·생태전환교육 강화 (국정과제 100-1)

□ 학생의 기후위기·생태환경변화 대응 역량 강화

-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전환교육의 가치와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 개발·보급(‘26)
※ 프레임워크 기반 ‘한국형 생태전환학교 운영 지침서’ 개발·안내(‘27)
- 교원의 기후·생태전환교육 역량 체계 개발 및 시범 연수(‘26. 340명), 학교 환경교육 연구대회 확대(‘25. 초·중등 → ‘26. 유·초·중등)

□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환경교육에 생태전환교육을 포함하고,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부와 협의하여 「환경교육법」 개정 추진
* 국가환경교육센터(교육부-기후부 공동운영), 학교 환경교육 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등

6 교육시설의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 기후환경 위기 대응 (가칭)School RE100 사업 추진

-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 실천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공립 초·중등학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확대
※ 전체 국공립 10,444교 중 미설치교 8,180교(78.3%)
- 소규모학교 제외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시설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
※ 목표: ‘26년 400교 시범사업, ‘30년까지 약 4,600교 목표

□ 학교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

- 학교 현장 부담 최소화를 위해 설치 주체를 교육청으로 하며, 위탁 운영을 통한 전문적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등 관리·운영체계 정비*

* 예시 : (서울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유지관리 보수, (민간기업) 유지관리 위탁 용역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①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국정과제 101-2, 3)

□ 국민이 서비스 질 개선을 체감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 돌봄 취약지역에 거점·연계형 돌봄기관을 확대('25. 56개→'26. 200개)하고, 지역여건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기관수급 관리* 지원

* 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 퇴로 지원(26.5~) 및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지도 시범 구축(26.하)

- 무상교육·보육의 지원 대상을 확대('25년 5세→'26년 4~5세)하고, 0세반부터 교사-아동 비율을 개선(現1:3→改1:2)하여 질 높은 환경 조성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를 완화('26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2만원 인상)하고 모든 교사의 4대 분야* 역량 향상을 지원

* ❶교육과정 실행, ❷성장·발달, ❸정서·심리, ❹특별한 영유아

- 정서·심리 관련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청-전문기관이 협업하여 적기에 지원하는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추진('26.2~)

□ 학교-지자체 협력 바탕의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도입

- 관계 부처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 및 지역별 모델 마련을 위한 지역별 협의체 구축·운영('25.11~)

- 지자체-학교 간 협력 돌봄·교육 운영 방안을 담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마련·안내함으로써 지역별 모델 수립 지원('25.12~)

* 지역 돌봄기관에 학교와 구분되는 역할(저녁·주말·긴급 돌봄 등)을 부여하는 모델 검토

- 기존 초1·2 무상 방과후(매일 2시간)에 더하여 초3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을 제공, 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 확대('25. 45%→'26. 60%)

※ 간편결제 인프라 '제로페이' 연계('26.3. 시범 도입)를 통해 업무부담 경감 및 이용자편의 제고

[2]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습 안전망 구축 (국정과제 101-1, 4)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 학생 개인별 성취기준, 정의적 특성, 사회·정서 역량 등 학습결손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25.12 개통)

* ①기초학력 수준 및 심리정서 진단, ②학생의 학습 이력 연계, ③보정학습 자료 제공 등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학습콘텐츠(e-book, 학습지, 동영상) 제공, 1교실 2교(강)사제*, 방과후 1:1 멘토링('26년~, 6만명) 등 학습 지원

* '25년 4,481교(전체 학교의 37%) → '27년 7,200교(전체 학교의 60%)

- 기초학력 전담교원과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한 기초학력 지원체계 강화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188개)를 통한 특수요인(경계선지능, 심리·정서) 지원

* (교원) '26년 525명 확충, 지속 증원 / (센터) '25년 5개 → '26년 전체 17개 시도

□ 통합·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연차적으로 특수교사 정원 확대

※ 정원 확보율 목표 : '25년 80% → '26년 82% → '30년 90.0%

- 특수학교 2교, 특수학급 600개 이상 신·증설을 통해 원거리 통학 어려움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특수학교 '25년 197교 → '26년 199교 / 특수학급 '25년 14,658학급 → '26년 15,258학급

- 특수교육대상자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교사(특수교육교원) 운영 방안 안내 및 통합교육 선도학교(정다운학교)* 확대(300교)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모델 개발·운영 및 협력교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행동중재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배치* 및 지원 자료(4종) 개발·보급

* 배치 목표 : '26년 200명 → '28년 350명 → '30년 500명

3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국정과제 101-5)

□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고위기 대응 강화

- 정기 선별검사 확대 추진(現 3년 주기) 및 마음EASY 검사(수시) 활성화하여 위기학생 조기 발견하고, 전문상담교사 증원('26년 150명)하여 교내 지원 강화
-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긴급지원팀*을 확충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학생 마음바우처’** 확대

* '25년 56팀 → '26년 65팀 / ** '25년 80억원 → '26년 치료비 + 상담비 100억원

□ 자살예방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및 위기요인 분석

- 모든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해 교육시간 확대(6차시→17차시), 학년 단계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선도교사 양성 확대('26년 1,500명)
- 학생 마음건강 위기요인 분석·대응을 위한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 실시 및 복지부와 협력하여 심리부검 실시('26년)

※ 「학생 마음건강 지원방안」 수립('25.12) 및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26.) 추진

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국정과제 102-2)

□ 학생·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 관할청의 고발 강화*, 학부모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학생의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 엄정 대응

* 고발 요건과 판단기준, 절차·방법 등 주요 내용을 「교원지위법」 등에 신설

**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범위 및 보존기간 등 검토

□ 기관책임형 학교민원 대응 및 지역단위 교육활동 보호 강화

- 학교민원 창구를 대표번호(유선), 온라인으로 통합하여 교원의 개인 연락처를 보호하고, 악성민원은 학교 → 관할청 이첩하여 책임 대응
-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및 교원보호공제사업 상향평준화,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 확대(現 5일 → 10일 限)

* 센터 수 : 55개('25) → 112개('26) / **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26.상)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①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국정과제 100-1~2]

□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 교원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토의·토론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교수학습 원칙 수립 및 법제화
- 범부처(법무부·법제처·선관위 등) 협력하에 헌법교육*·선거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 역량 개발

* △전문강사 특강('26. 고등학교 확대2,000학급), △EBS 영상콘텐츠(5분×6편, '26.3월) 및 토론형 헌법교육 자료 ('26.6월) 보급, △교장 자격연수(약 3,000명) 및 교원연수 강화(법제처, 시도별 5회 내외)

-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150개) 지정·운영, 시도교육청별 자율적인 민주시민교육 브랜드 운영 지원을 통해 현장 우수모델 발굴·확산
-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안)」 수립('25.12.), 교육부 내 민주시민 교육과 설치('26.1),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을 통해 정책 기반 마련

□ 균형 잡힌 역사교육 강화로 민주 시민의식 함양

- 토의·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체험중심 프로그램, 학생 동아리 활동 및 경연대회 등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 지원('26년~)
- 민주화운동 역사체험 프로그램(34개), 역사캠프(34회), 역사 컨텐츠제작 대회 등
- 근현대사 영역·시수 확대(中), 선택과목 신설(高, '26.3. 국교위에 요청)로 심화학습 기회 제공하고, 현대사 아카이브 구축 등 교육콘텐츠 확대
- 역사 학습을 통해 국가 정체성 확립과 시민적 가치를 탐구할 수 있도록 역사교사 학습 공동체 지원 및 교원 연수 강화('26~)

※ ('26) 교사연구회(20팀), 선도교사단 운영(100명), 저경력 교원 연수(300명) 등

②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개방·활용 (국정과제 55-5)

□ 교육시설 개방·활용 확대 및 전문적 관리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가칭)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교육 시설을 위탁 관리(학교→공단)함으로써, 학교 시설의 개방 확대 추진(‘26.상)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교육청-지자체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 확대 및 지역 주민 참여를 위한 조례개정 권고

□ 폐교 등 유휴시설의 공공자산화

- 폐교 활용절차 간소화,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활용 용도 네거티브 방식 명문화, 무상대부 및 수의계약 특례 확대*를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26.)
* 교육·사회복지·공공체육·문화·소득증대·귀농어시설 → 기존 + 통합돌봄 + 공공시설

③ AI를 활용한 대학 진학상담 고도화

□ AI 기술과 대입상담교원을 융합한 대입상담체계 구축

- AI 모델(LLM) 기반 대화형 정보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학부모가 복잡한 대학입시정보를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26.3. 시범운용)
- AI서비스와 대입상담교사단(500명)의 입시상담을 연계·융합하여 상호보완하고, 학생·학부모 상담 수요가 높은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 신설(‘26.3.)

□ 「2028 대입개편」에 맞춘 AI 입시 상담 서비스 단계적 고도화

- 정량평가 중심의 대입전형(학생부교과, 수능위주전형 등)에 대해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 제공으로 사교육 부담 경감 추진(‘27.하)
- 고교단계부터 학생 개개인의 진로진학 목표에 맞는 수강과목선택, 교내활동 등 학업설계와 연계한 ‘AI 학생부 컨설팅’ 단계적 도입(‘28~)

4 국내·외 한국어교육 확산

□ 해외 ‘한국어반’ 중심 한국어교육 활성화

- ‘한국어반’ 등 해외 정규 교육제도 내 한국어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한국어학습 → 한국 유학 → 취업 → 정주」로 연결
※ 우수 유학생 유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교육원 역할 강화
- 현지 ‘한국어반’에 청년 위주 한국어교원*·보조교사** 파견 확대 및 현지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방한연수 지원(18개국)
- * (한국어교원) 관련 자격증 소지자 파견('25 : 77명 → '26 : 80명 → '27 : 200명)
** (보조교사) 대학생 등 비전공자 포함('26 : 20명(시범운영) → '27 : 100명)
- 나라별(10개국) 맞춤형 교재 등 종이책 보급(26만권) 및 모바일·학생용 전자책을 신규 개발('26)하고, 재외동포용 교재·교육자료를 연계 개발
- 급증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홈테스트·AI 활용 채점 도입 등 디지털 시스템으로의 전환 추진*

* ('25) 추진계획 수립 → (~'28) 시스템개발 → ('29) 시범 도입

□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체계화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초·중등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춘 한국어 역량 진단 검사도구 개발하고, 진단 정보에 기반한 학습 지원
※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가칭)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26.상)
- 한국어학급(특별학급)·위탁 과정 확대 등 통해 「입학 전·후 한국어 집중교육 → 초기 수업 지원 → 학업·진로 지원」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 교육 실시
※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방과후교육, 방학 등을 활용해 한국어 프로그램 지원
- 학습한국어* 자료 신규 개발, 생활한국어 교재 개정 등 현장 중심 교육자료 보급하고, AI 기반 한국어교육 시스템(‘모두의 한국어’) 고도화

* 교과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해 교과 어휘 학습에 관한 한국어 교육 자료

5 교육 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 교육강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 높아진 교류·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강점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고위급 공동위원회 등) 강화('26~)
- 국제포럼* 정례화, 교육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AI 교육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GATE(Global AI Talent & Education) 포럼, APEC 미래교육포럼 등
 - ** ASEAN+3(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 교육장관회의('26.7) 공동 의장 수임 예정
- Campus Asia 4단계('26-'30년) 사업을 통해 AI·첨단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해외진출 선도모델* 발굴·지원('26.상)
 - * (예) 교육과정 공동운영, 해외 캠퍼스, 글로벌 전공특화,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등

□ 한국 마이스터고(K-마이스터) 모델 확산

- 세계적인 제조업 숙련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 마이스터고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확산
 - * 조기 취업, 전공-직무 일치도, 장기 재직률 등 측면에서 우수 성과 입증
- 국가 간 MOU 체결 및 K-마이스터 컨소시엄 구성('26.상)하고, 전·현직 교원 및 명장 파견 등 시범학교 운영('26.하)
 - * ('27~) 시범사업 성과 평가등에 따라 협력국 내 다른 지역 확대 적용 등 추진

□ 우수 현장형 고등직업교육 모델의 글로벌 확산 지원

- 美 현지 숙련 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 우수 전문대-기업 연계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추진('26.)
- 美 현지 한국공장 직무분석을 통한 실무 교육과정 개발 등 커리큘럼 현지화 및 양국 학생·교원의 파견·교류 지원 추진